

## 창조경제와 협동사회경제

국회의원 김기준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창조경제일 것이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고 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걸로 봐서는 당분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창조경제 논의가 앞으로 시장만능주의와 효율 중심의 성장 옹호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성장률에서 찾는 이상 해답은 결코 나올 수 없다. 경제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를 경제성장이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창조’라는 텍스트에서 왠지 마른 수건이라도 짜서 경제성장률을 높여보겠다는 안쓰러움이 묻어나기 때문에 해보는 걱정이다.

반면 요즘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한 가지 있다. ‘협동사회경제’ 혹은 ‘제3섹터’, ‘사회적 경제’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경제도 아니고 국가경제 영역도 아닌 또 다른 경제적 주체를 설명하는 말인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연상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자립, 자조를 통한 연대’를 기초로 시장이나 국가가 할 수 없는(정확히는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 내수시장의 활성화’, ‘지역발전’, ‘경제민주화’, ‘생활보장형 복지국가’ 등을 추구한다.

협동사회경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설지는 몰라도 이미 세계적인 이슈가 된 지 오래다. 1980년대 초반 국가경제와 시장경제만을 가지고는 해소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지금은 유럽 등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영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단순히 주식회사 제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한다거나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협동사회경제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 경제나 시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장경제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경제영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는 재벌들의 더티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효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협동사회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아울러 협동사회경제는 복지국가 논쟁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복지국가 담론이 대안 위주의 실질적 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 협동사회경제의 개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면서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영리적 복지전달체계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금급여는 공적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 부문을 정부기구가 직접 수행하거나 영리기업에게 위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문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담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동사회경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협동사회경제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력저하와 훼손이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 지자체들은 관내 여유자금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자본 유치를 시도해 보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기초로 한 협동사회경제를 통해 그 해결책 모색이 가능하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무한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 공동체를 우선에 두는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협동사회경제 정책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거시적 경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차원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벗어나 국가 운영전략이라는 큰 측면에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협동사회경제는 우리나라의 향후 운영전략을 수립하는 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협동사회경제의 정책 논의는 국가 운영전략이라는 관점보다는 취약계층의 보완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방향과 세부적인 정책제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책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적 의제에서는 소외돼 있어 사회경제의 문제점을 타개하고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그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이 협동사회경제 정책을 주도해야 할 때가 왔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협동사회경제와 관련한 정책들을 알고 있다. 농, 수협 등 개별 협동조합과 관련된 정책, 지난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복지 영역의 자활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중 농, 수협법은 1차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자활사업은 복지라는 측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 접근은 협동사회경제의 근간인 자립과 자조를 통한 상호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난해 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 만으로는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낙관하기 어려운 처지다. 어려운 산고를 이겨내고 도입된 법률이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주도의 기형적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한답시고 협동사회경제의 물꼬를 엉뚱한대로 틀어버리지는 않을까하는 것이다. 협동사회경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핵심이다. '창조'라는 말에서 성장률과 성과주의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는 한, 두 가지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협동사회경제 활성화의 당면 목표로써 '민간 역량의 충분한 성숙'을 제시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해야 한다. 관료들이 주도하는 선부른 육성지원책이나 쏟아붓기식 보조예산 투입은 오히려 협동사회경제의 기본틀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의 정책은 민간 부문 스스로가 역량을 쌓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부나 관료들이 나서서 휘젓고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민주당은 현재 협동사회경제를 추진하는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큰 틀의 정책방향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향후 붓물 터지는 밀려올지도 모르는 협동사회경제 관련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커다란 경제영역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한계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해소 논의에 있어 '협동사회경제' 관련 정책 대안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